

남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영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76
----------	-----

발의연월일 : 2021년 3월 10일

발의자 : 이영환, 박은경, 원병일
이정애, 최성임

1. 제정 이유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가정해체·붕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시신인수가 기피·거부되어 장례를 치루지 못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통해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나. 공영장례 지원의 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공영장례 지원 방법 및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 제6조)
- 라. 공영장례 업무의 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마. 공영장례 대행기관에 대한 감독 및 지원금 환수 등을 규정함.(안 9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관련 기관 및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

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火葬)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이 공영장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등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병풍, 상, 향로, 촛대 등 장례용품
3. 장의차, 노무비, 화장비용 등
4.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

② 제1항에 대한 지원액 또는 지원물품의 지원 수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업무의 대행) ① 시장은 공영장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례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기관에 제6조제2항에 따른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추모의식)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간소하고 품위 있는 추모의식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점검 및 환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나 대행기관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목적에 적합한 공영장례 절차를 이행하는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원금을 수령한 자나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본 조례안의 재정수반요인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에 소요되는 장제비용이 해당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2021년 예산편성된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용은 신문광고료, 봉안비용을 포함하여 6,950만원으로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됨.

4. 작성자

복지국 복지행정과장 유희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5. (생략)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